두채 이상 주택 보유 1년새 4천명 껑충

광주·전남 다주택자 11만5천명…두채 보유 9만7천명 17%↑

부동산 시장 실수요자 보다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 높아

광주·전남에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2014년 말 기준으로 4000명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혜택과 청약자격완화 등을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되지만 30대를 중심으로 주택 실소유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이 증가하면서 투기자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주택을 두 채이상 소유한 개인(공동 소유 포함)은 각각 광주 4만5000명, 전남 7만명 총 11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000명(1.7%)이나 증가했다. 두 채로 집이 늘어난 시·도민은 9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6000명 16.5%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1년 사이 개인 주택 소유자 증가율 1.8%포인트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집을 새로 산 인구 중 두 채 이상을 마련한 다주택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세 채 이상 다주택자가 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000명 16.7%나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은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거주하는 시·도에 주택을 가진 사람 비중이 각각 87.3%와 86.2%로 전국 평균 86.2%보다 높아 외지인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이 92.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제주(90.9%), 부산(90.8%), 전북(90.6%)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세종(63.4%), 충남(81.6%), 인천(81.7%)에선 거주지와 소유 주택 소재지가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쏠림 현상이 더 심각했다. 2014년 말 광주·전남 지역의 아파트 총수는 66만7000호로 전년 63만3000호에서 2만8000호가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49만6000호로 전년보다 2만6000호(5.6%) 늘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이 증가하는 속도가 한 채만 갖고 있는 개인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 전문가들은 투자 수익을 노린 전문투자자가 개입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 거래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중개인·중개법인) 수와 개인 임대사업자 증가로 반영됐다. 거래가 활발했던 광주의 경우 2014년 4분기 기준으로 전분기 보다 16명 늘어난 2401명을 기록했으며 임대사업자 역시 최대 증가치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다주택 소유자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소유 개인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보다는 투기세력이 개입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 주관으로 한국광기술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유관기관 참가자들이 상담창구를 찾아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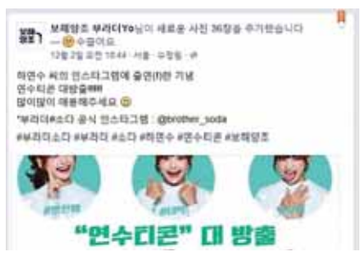
"2030, 부라더#소다에 응답하라"

보해, SNS 통한 소통 강화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 9월에 선보인 신개념 탄산주 '부라더#소다'가 2030 세대들과 활발한 소통에 나선다.

'부라더#소다'는 제품명부터 SNS를 즐기는 젊은 소비자들과의 교감을 위해 '부라더'와 '소다' 사이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쓰이는 '#(해시태그 : 특정 단어에 대한 글임을 표현하는 기능)'를 넣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부라더#소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brother_soda)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bohae→brewery)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SNS에서 부라더#소다는 TV광고 촬영 현장 후기와 모델 하연수의 깜찍 발랄한 모습을 담은 B컷 사진을 공개하는 등 소비자들과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네티즌들도 직접 제작한 움짤(움직이는 짧은 동영상)을 게재하며 소통에 화답하고 있다. 광고에서 하연수가 보여준 앞구르기, 몸으로 이불 말기, 스카이 콩콩 뛰기 등 혼자 노는 장면을 움짤로 만들어 또 하나의 새로운 광고로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25.43 (-5.10)
- 금리 (국고채 3년) 1.64% (0.00)
- 코스닥 687.27 (+3.20)
- 환율 (USD) 1197.90원 (+9.90)

상록회관 아파트 건설 절차 막바지

사업계획승인만 남아…벚꽃군락 일부 훼손 불가피

광주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설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조만간 건설공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상록회관 내 벚꽃군락지의 일부 수목은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광주시와 서구청, 농성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광주시에 조만간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건축위원회에서는 아파트의 평형에 따른 가구 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데 여기만 통과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사업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다룬 지구단위계획 자문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총 계획가구수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채워 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도 받았다. 지역주택조합은 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한편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건설대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해야 하는데 조합이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본격화하면 그동안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던 상록회관내 벚나무 보호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군락지는 사업부지 내 공원 등을 기부채납받아 보호할 예정이지만 일부 벚나무는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노사 2015 임단협 잠정 합의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등

기아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국 해를 넘겨 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선거로 뽑힌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 만이다.

먼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섭에서 확대 방안을 합의해 시행키로 했다.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 59세 10%, 만 60세 10%)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한 뒤 계속 논의해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은 악화된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기본급 8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성과 포상금 400% + 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 + 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주식 55주 및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으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11일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상의 '고용전략개발 포럼' 최우수 포럼 선정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고용현안 해결과 일자리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용전략개발 포럼사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15년도 전국 고용포럼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포럼으로 선정됐다.

'고용포럼'은 고용노동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전국 16개 시·도간 경쟁사업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한해 동안 7차례의 정책포럼과 연구사업 등을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문제 등 다양한 지역 고용현안을 다뤘으며 전문가들과 공동 논의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 및 산업여건에 적합한 고용창출 방안을 모색해왔다. /김대성기자 bigkim@